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<b>한국판뉴딜</b>
	배포일시	2021. 1. 28.(목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동현, 팀장 박효철, 사무관 송혜연, 주무관 최상욱 • ☎ (044) 201-3817, 4770, 3813, 4755	
보도일시	2021년 1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8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

### - 전국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·승차거부 없고 편리한 서비스 기대 -

-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승차거부 없이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,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브랜드 택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'21년 1월 25일 기준으로 국토부의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\*가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가 '19년 말 대비 18배 증가하여 총 30,539대라고 밝혔다.
  - \* KM솔루션(카카오T블루), DGT모빌리티(카카오T블루), KST모빌리티(마카롱 택시), (주)나비콜(나비콜), 코나투스(반반택시그린), VCNC(타다라이트)
  - 시·도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총 11,417대가 운행되고 있으며, 대구(6,275대), 경기(3,269대), 울산(1,891대) 順으로 브랜드 택시가 많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(경남은 아직 미운영)
- 브랜드 택시의 이러한 증가세는 그간 운송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\*하고, 규제 유예제도(규제 샌드박스)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실험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 기반 택시서비스의 혁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온 것에 대해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적극적으로 부응한 결과로 분석된다.

\* 운송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기존의 1/8 수준으로 완화(예: 서울 4천대→5백대)

-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로 국민들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승차거부와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어디서나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한편, 유아 카시트, 펫택시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는 등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택시업계 역시 정보통신기술(ICT)을 이용한 효율적 차량관제 및 배차, 서비스 평가 등이 가능해져 더욱 효과적인 경영관리와 함께 수입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.

□ '21년에도 브랜드 택시의 확산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.

- 기존 6개 전국 단위 가맹사업자들의 사업구역, 운영대수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, 시·도의 면허를 받은 지역 기반 가맹사업자들도 점차 증가\*하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\* 리라소프트(토마토택시, 부산 '20.8 면허), 우버코리아(우버택시, 서울 '20.12 면허), 진모빌리티(IM택시, 서울 면허 준비 중) 등

- 무엇보다 올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시행으로 운송가맹사업이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이 확대되고,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의 등장이 가능해지는 한편,

\* 가맹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한 호출·예약방식으로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택시에 대해서는 탄력요금, 구독요금 등 다양한 요금제 제시, 고객은 선택가능

- 국토교통부가 각종 중복규제 해소, 양질의 기사 확보를 위해 제도적 지원(차고지 밖 기사교대, 택시 임시자격 등)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향후 가맹사업자의 사업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.

- 또한, 일부 업체에서 11인승 승합차량이나 고급차량 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은 기존 중형 승용차 중심의 획일적인 차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차종을 선호에 따라 선택하여 쾌적한 운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
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“택시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으로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”면서,
- “‘21년에도 가맹택시 서비스의 양적성장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한 규제개선, 업계와의 소통 등에 힘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송혜연 사무관(☎ 044-201-381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